■ '전효숙 인준안' 내일 처리 가능할까?

야 4당 오늘 대표회동 분수령될 듯

여 직권상정 '으름장', 한 '지명철회' 고수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땐 국민 비난 불보듯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의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헌재소장의 공백 사태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은 1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좌우할 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여당이 비교섭 야3당과 협의해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위헌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근 여당과 야3당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이 담합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인내와 타협에 한계가 있으며 민심은 비등점을 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고,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동안 생중계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제 와서 표결을 못하겠으니 자진사퇴하라고 하면 누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여권은 야3당의 중재안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사과, 법사위 청문회 등을 수용했다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나라당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결정적 캐스팅 보트를 쥔 야3당도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공백이라는 국민적 비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만간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는 19일에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파행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에는 정치력 부재, 한나라당에는 내부 혼선에 따른 말 바꾸기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헌재 수장 공백이라는 파행 사태를 장기화 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을 뒤집어쓸 공산이 큰 데다 여성계의 반발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당 일각에서 "이만큼 했으면 됐다"는 온건론이 꿈틀거리고 있으나 강경론자들의 주장이 워낙 강해 세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가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지만 초장부터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치불신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건 대권캠프 가입인사' 리스트 인터넷 배포

진위여부·작성주체 논란

정재계 인사 37명 명단 올라

유력 차기 대선주자중 한 명인 고건 전 총리가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선 가운데 '고건 대선캠프'에 참여할 인사들의 명단이라고 명명된 정체불명의 리스트가 온라인상으로 배포돼 진위 여부와 작성주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고 전 총리 담당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된 '2007년 고건 대권캠프에 참여할 인사 명단'이란 문서에는 정계인사 27명과 재계인사 10명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있다.

명단에 따르면 정계인사 중에는 열린우리당 전.현직 의원 13명, 민주당 전.현직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1명, 전직 관료 7명이 '고건 캠프'에 참여할 것으로 적혀있다.

재계인사 명단에는 전.현직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오너도 포함됐다. 고 전 총리가 즐겨쓰는 표현 'Great Korea'(위대한 한국)를 ID로 사용한 명단 작성자는 이메일에서 "최근 고 전 총리가 부지런히 접촉한 뜻에 맞는 정·재계 인사들 명단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명단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고 전 총리는 이미 상당한 세력을 구축한 셈이지만, 명단에 언급된 인사 가운데 일부는 문서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명단에 거명된 인사들이 이처럼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나서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고 전 총리측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권도전 그때가서 검토"

천정배 전 법무

열린우리당 내 '잠룡(潛龍)'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천정배 의원이 지난 16일 대권도전 여부와 관련,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며 대권도전 의사를 사실상 나타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광주북갑 당원대회 초청특강에서 '대권도전 의사가 있는가'라는 한 당원의 질문에 "선공후사(先公後私 : 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룸)다. 먼저 열린우리당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고 천 의원 측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원도 민심탐방 나선 손학규

지난 16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100일 민심 대장정에 동참한 남경필, 박찬숙, 정병국 의원이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내촌농협 유통센터에서 풋고추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탤런트 하지원

국정감사 증인 나설까

여야 상임위별 증인신청 물밑 기싸움 '팽팽'

이백만 靑 수석·김문수 경기지사 신청 명단에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간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야당은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정국현안이 걸려있는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한층 죄겠다며 다양한 국감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맞서 여당도 맞불카드성 증인 채택 전략을 구사하는 등 여야간 초반 기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동료 의원이나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 공무원, 재벌총수나 전문경영인 등 경제인은 물론 여승무원이나 한의원 원장 등 이색적 인물들도 증인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증인 채택과정이 단연 주목을 받는 곳은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경질과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을 다루는 문화관광위. 한나라당은 6건에 33명의 증인 목록을 작성하는 등 공세적인 자세다.

한나라당은 인사파문과 관련, 유전 차관과 청와대의 이백만 홍보수석 및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신청했고, 바다이야기 건으로는 전 영등위 심사위원들과 게임산업개발원장, 김민석 한컴산 대표, 김용환 안다미로 대표 등을 신청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는 60여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 재벌총수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정무위에는, 김문수 경기지사, 이기우 전 교육차관, 탤런트 하지원씨도 증인신청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위에서는 한나라당이 부동산 정책문제로 추병직 건교장관, 비전2030의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해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남북협력기금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이종석 통일장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 미국인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대표변호사를 신청했다.

재경위는 지난해 국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다시 부르자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이 회장의 증인 불참에 따른 고발문제는 1년 가까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이 회장은 올해 법사위 증인으로 신청됐다. 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 의혹으로 이 회장과 장남 재용씨,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여야중 한쪽의 일방적 요구이기에 향후 여야 협의과정에서 상당수가 걸러질 전망이어서 최종 협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검찰 고발 22% 불과

민노당 노회찬 의원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비율이 22%에 불과하고, 설사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실제 재판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1988년 이후 일반증인의 국감출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까지 채택된 일반증인 2천152명 중 17%인 370명이 불출석했고, 이중 22%인 81명만이 상임위 의결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토요일도 공휴일 포함 8개 관련법 개정 추진

우리당 문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7일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기 위해 민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관세법·응급의료법·증권거래법·군행형법·행형법 등 8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관공서에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대부분 직장도 주5일제를 시행하지만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공휴일이 아니다"며 "이로 인해 법률상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기한이 이날일 경우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노대통령 27일 회갑연 靑, 별도 행사 검토안해

청와대는 오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만60세 생일(음력 8월6일)인 회갑일을 맞아 별도의 회갑연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께서는 회갑을 맞아 당일 아침 수석·보좌관들과 조찬을 함께 하는 일정 정도를 잡고 있고 청와대에서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회갑연에 노사모를 초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사모를 청와대로 초청한 사실은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